

‘2026 대구마라톤’ D-12 카운트다운!

대구,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4대 분야 중심 최종점검 보고회 개최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2026 대구마라톤’이 개막을 12일 앞둔 가운데, 대구시는 대회 막바지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오는 2월 22일(일) 역대 최다인 4만 1천여 명의 국내외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2026 대구마라톤’을 앞두고, 대회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대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최종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관련 부서 실·국·본부장, 구·군 및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운영 분야에서는 △약 5,000명의 인력 운용계획과 △도시철도 이용 지원을 위한 역사 인근 학교 주차장 등 주차공간 6,000여 면 확보 현황 △화장실 364개소 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대회 중 시내버스 75개 노선, 918대 우회 운행 계획과 △행사장 접

근성을 위한 셔틀버스 3개 노선, 38대 운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안전 대책에서는 먼저 △단계별 원업 안내영상 제작·배포 △스타디움 및 컬러스퀘어 내 대기 공간 확보 △보온 로브 및 은박지 제공 등 방한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380명이 투입되는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본부 1개소 및 의료지원부스 5개소 △응급의료기관 후송병원 9개소와 △코스 내 2.5km 간격으로 배치되는 구급차 23대 운영 계획까지 최종 검토했다.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24개 팀, 700여 명 규모의 응원단 배치와 함께 교통통제 홍보를 위한 △TV·신문·라디오 방송 △1,600여 개 도시철도·버스 안내관 송출 △현수막 360여 개·전단지 21만 매 배포 상황을 확인했다. 황보란 국장은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윤석 기자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해법 모색

돌봄과 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자생공동체 육아 생태계 구축



경상북도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돌봄 모델인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두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가 결합된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6년 핵심과제인 ‘주민행복마을 조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거점 공간에는 ▲돌봄 살롱(한국형 마더센터) ▲창의·과학 교육 ▲돌봄 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은 물론,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생활 인구 증가, 돌봄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두레마을의 핵심

인‘자생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10대 실천규약(안)’을 마련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7개 시·군(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살롱과 종합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 부모 상담, 놀이·교육, 공동체 활동이 한 공간, 한 동선에서 이뤄지도록 설계한다. 청도군은 북상동, 심 카페, 작은 도서관을 연계해 세대가 일상에서 교류하는 돌봄공간을 조성하고, 양육 클래스와 일자리·창업 교육 등을 상시 운영해 돌봄, 교육, 일자리를 결합한 구조를 만든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이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착공

진주시는 9일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진주대로1143번길 3)에서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백승훈 진주시의회 의장,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도·시의원과 유관기관·단체장, 성북·중앙·상봉동 등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Re-Born센터의 시착을 축하했다.

‘Re-Born센터’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은퇴 후에도 높은 전문성과 활동 의지를 가진 5060 신중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이 센터는 연면적 749.23㎡, 지상 4층 규모의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 ▲디지털실·교육실 ▲

동아리·커뮤니티 활동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춰 신중년의 교육과 사회 공헌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중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일자리의 발굴·연계, 공유사무실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진주시는 센터가 완공되면 은퇴 인력의 사회 재참여를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신중년들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세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뉴실버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라며 “Re-Born센터가 신중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고,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며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대학 캠퍼스 인건 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권진희 총장),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오세범 총학생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김민규 지회장), 가호동 주민대표(최윤환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룡 기자

농업 대전환 시동 스마트농업 1,109억 원 투입

경상남도가 올해 총 1천10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6개 사업, 242억 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19개 사업, 624억 원)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8개 사업, 243억 원)이다.

먼저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천600명으로 확대 육성하고, 2030년까지 3천 명을 목표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과정 수료생도 올해까지 230명, 2030년까지 430명 배출할 계획이다. 수료생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경남도, 청년 스마트농업인 2천600명 육성·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온실 1만 ha 가운데 올해 35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0ha로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 재해예방시설도 올해 170ha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500ha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30개소에 133억 원을 투입하고, 10ha 규모의 청년농업인 분야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89억 원, 청년소규모 스마트팜 7개소 조성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200ha에 110억 원, 시설원예

온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5ha에 36억 원,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시설 7.7ha 조성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에 108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지원 33개소에 56억 원을 지원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강화한다.

권역별 임대형 스마트팜 지구도 동부권 밀양, 북부권 거창에서 조성 중이다. 스마트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시범 사업을 연계한 기술 보급을 통해 초보 농가도 쉽게 스마트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도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추진 이래 최대 규모이자 전년 대비 2배인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52억 원을 편성했다.

최성룡 기자

울주 2026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한다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계약…올해 지원요건 대폭 완화

울주군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울주군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이 울주군민을 새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까다로웠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주군은 사업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실채용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기준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 기준이 폐지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울주군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당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현실에 맞게 낮춰 근로시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15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는 다

음달 중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나해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와 현장의 개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며 “요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이 올해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216억 원의 57%인 123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지방세 체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호근 기자

전차량 이용 대심도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부산 교통지도 새롭게 그릴 미래형 교통 인프라, 내부순환도로 완성



부산의 교통혁신을 이끌 새로운 교통지도가 25년 만에 완성된다! 부산시는 10일 자정(0시)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개통에 앞서 시는 9일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인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진행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9.62킬로미터(km)의 왕복 4차로의 터널로, 국내 최초 전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이다.

이는 국내 최초 지하 40m 이상 깊이에 건설되어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심통과 지하도로’로서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하며 지상 중심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는 2001년 「부산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수립된 이후 25년 만에 남은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시는 대심도가 부산 도심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부산

과 동부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해운대 간 접근성 강화로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통을 통해 만덕에서 센텀까지 기존 41.8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되며, ▲연간 통행비용 648억 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1조 2천332억 원 ▲고용창출 9천 599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월 19일부터 통행료가 부과된다. 만덕IC에서 센텀IC 통과 기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2시,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의 승용차 기준 2천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전문예술법인과 단체 지정 통해 문화도시 기반 강화

울산시가 지역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우수 문화예술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기부금 모집과 보조금 지원 등 제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지닌 울산에 소재한 문화·예술 활동과 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미술·음

악·무용·연극·국악·사진 분야의 전시, 공연, 기획,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전시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공익법인 등(예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월 3일까지 울산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정된 법인·단체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61개 단체를 지정했으며, 매년 5개 안팎의 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26년 상반기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와 오보에, 바순, 트럼펫, 트롬본, 호른 등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부문이다.

이호근 기자